광주시, 부품업체 100곳 미래차 전환 지원 본격화

12일까지 차체·섀시·전장 등 5개 분야 5~10개사 우선 모집
사업화 모델 발굴·종합 구조진단 통해 기술·품질 역량 강화

광주시가 지역 자동차부품업체를 대상으로 미래차 핵심부품인 소프트웨어(SW)와 전자부품 전환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그린카진흥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과 협업해 지역 내 영세한 중소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기술역량을 비롯한 품질역량, 미래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미래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앞두고 지역 부품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핵심 소재부품의 자립률을 높이는 게 사업 목표다.

광주시는 특히 국내외적으로 급성장한 미래차 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생존 위기에 내몰린 내연기관 중심 지역 부품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돕고, 신시장 진출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주요 지원 내용은 친환경 전기차(EV),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장으로 진입할 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화 모델(BM) 발굴, 인력·사업재편 기업 종합 구조진단 실시, 기업 애로기술 해소 등을 통해 기업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참여 대상기업은 지역내 자동차 부품기업으로서 미래차 전환을 준비하고 있거나 현재 추진하는 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일단 1차로 내연기관, 차체·섀시 , 의장, 전장, 가전·광학 등 총 5개 분야에서 5~10개사를 선정하고,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내년까지 가시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광주 부품기업 실태조사와 연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유관기관 간 산·학·연 협의체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전략들이 사업화로 직행할 수 있는 역량 마련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향후 지역 부품기업 100개사를 미래차 분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지원 대상 기업을 늘려가기로 했다.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미래차 전환 기업역량 강화 사업은 지역 부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차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부품기업의 품질, 기술력 강화와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차 전환 기업역량 강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6일부터 12일까지 지원서류 등을 작성해 광주그린카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1~2차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이달 중으로 최종 선정한다. 제출서류 및 참여자격 등은 광주그린카진흥원 누리집(https://www.gigca.or.kr) 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하남 시립도서관 착공식 강기정 광주시장이 5일 오후 광산구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착공식에 참석해 정무창 광주시의회의장, 권은희 국회의원, 박병규 광산구청장, 한승원 작가 등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AI집적단지 홍보관 인기몰이

AI사업단, 국제AI 전시회서 데이터센터 등 재현…이해도 높여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시민에게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그대로 재현한 홍보관을 선보이는 등 AI사업 알리기에 적극 나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따르면 AI사업단이 지원하는 AI스타트업들이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 인공지능 전시회 'AI TECH+2023' 내에 마련된 홍보관에 대거 참여해 혁신적인 AI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AI사업단 홍보관은 59㎡(18평) 규모 꾸며졌는데, 광주 첨단 3지구에 조성 중인 AI집적단지의 핵심 시설인 AI 데이터센터와 실증센터, AI 창업 및 기업을 지원하는 창업동 외관을 최초로 재현했다. 또 홍보관 앞 중앙에는 수조를 조성하고, AI스타트업 '오든'의 실시간 해양 환경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과 '에코피스'의 수질오염 인식 AI 스마트 수질 관리 로봇을 전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AI집적단지는 현재 광주 첨단지구에 대지면적 4만7246㎡, 건축연면적 2만4830㎡ (데이터센터 3227㎡, 창업시설 8999㎡, 실증시설 1만2103㎡, 부대시설 501㎡) 규모로 조성 중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선 AI사업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AI스타트업들의 제품·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주목을 받았다.

'이노디테크'는 3D 스캔 치아모델의 영상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3D 프린팅 치아교정장치를, '크리에이티브마인드'는 'AI 음악 작곡 서비스'를, '밍글콘'은 인공지능 기초 열량인 컴퓨팅 사고력 개념을 콘텐츠로 개발한 교육 도구인 '인공지능 향상 교육 콘텐츠'를 선보였다.

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메타버스 스피치 시뮬레이션 콘텐츠를 선보인 양지현 '디벨롭스토리즈' 대표는 "AI집적단지를 그대로 재현한 홍보 부스에서 제품을 홍보한 덕분에 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듯 하다"고 만족해 했다.

김준하 AI사업단장은 "앞으로도 많은 AI스타트업이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광주를 세계가 주목하는 AI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일 오염수 직격탄' 전남 어민 지원 대책 마련 나서

도의회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연장' 대정부 건의안 채택 등

전남도의회가 지역 농·어민들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어민들이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등 한계 상황에 내몰리면서다.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안전 대책도 정부 예산 삭감으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햅쌀 수확기에 비축미 5만t을 시장에 방출한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 쌀값 급락을 우려하는 쌀 농가들의 고민도 흘려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남도의회는 이같은 점을 감안, 5일부터 열리는 제 374회 임시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는가 하면,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대응 방향을 모색키로 했다.

도의회는 이날 신의준(민주·완도 2) 의원 대표 발의로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양식시설 현대화 자금·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어촌정착 지원자금 등을 받았다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가 위축된데다, 전복 가격마저 급락하면서 원금을 상환하거나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어민들의 하소연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내년 어민들이 갚아야 할 정책자금 및 이자가 올해와 비슷한 103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기간을 늦추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도의회 입장이다.

전남도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와 지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건의했던 8개 사업(402억)이 전액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무관하지 않다.

전남도는 지역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광역방사능 감시방재센터 구축(30억) ▲영해기점 섬 방사능 실시간 감시장비 설치(8억) ▲해수 방사능 실시간 감시장비 설치(3억3000만원) ▲휴대용 방사능 측정장비(위판장 52곳, 천일염 6곳, 양식장 2957곳 등 3015개소, 180억 9000만원)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3억) ▲친환경 수산물 인증비 지원(50억) ▲수산물 소비촉진행사(50억)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확대(76억 7700만원) 등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해수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도의회는 이에따라 ▲2024년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유예 ▲어업인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도의회는 또 '정부의 농협 수확기 공공비축미 방출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도 김문수(민주·신안 1) 의원 발의로 채택,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지방정가 라운지

"장애인콜택시·바우처택시 사각지대 해소를"

박현숙 전남도의원

박현숙(민주·비례)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제 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콜택시·바우처택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혼자 이동이 불가능하더라도 장애인콜택시나 바우처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대책 마련에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 주장이다.

박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취지와 달리, 이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4월 '장애인교원 지원'과 '장애인콜택시 증차'를 위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나서는 등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